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통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문서번호	지역언론통아보기2022-05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제 목	[지역언론통아보기] 동서학원 일가 ‘특혜 거주’ 의혹 사라지고 해결사 장제원과 지산학 협력 동서대 남았다
●모니터기간	2022년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날 짜	2022년 4월 1일

동서학원 일가 ‘특혜 거주’ 의혹 사라지고 해결사 장제원과 지산학 협력 동서대 남았다



부산 지역 대표 사학 가운데 하나인 동서학원 이사장 일가가 학교법인 소유 고급아파트에 시세보다 싼 전세가로 10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은 재단에서 부담해와 ‘특혜 거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25일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검증’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당선자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일가의 ‘특혜 거주’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러한 ‘특혜 거주’가 윤석열 당선자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행태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구의 3선 국회의원으로, PK와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떠올랐고 최근 지역 현안과 관련해 핵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검증의 대상이 된 동서학원은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등 부산에서 대학만 3개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 사학재단이다.

뉴스타파의 윤석열 인수위 검증 명분을 떼놓고 보더라도, 지역 대표 사학재단, 지역대학 총장, 지역의 3선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의혹제기를 쉬이 넘길 수 없다. 지역언론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함이 옳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25일 보도 이후, 지역언론은 관련 내용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역언론 보도에서 동서대학교 관련 기사를 살펴봤다. 지난달 24일 동서대학교에서 '오픈캠퍼스' 행사가 열렸고, 이 소식을 국제신문, 부산일보, KNN이 보도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인 27일자 21면 하단에 24일에 발생한 소식을 배치하기도 했다.

또 지난 28일 부산시가 체결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소식에서도 동서대학교가 언급됐는데, 메가존클라우드(주)가 동서대학교 선텀캠퍼스 내 부산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다.

지역언론은 학교 행사나 캠퍼스 내 기업 부산법인 설립 소식은 보도한 반면, 대학 총장 일가의 '특혜 거주' 의혹은 보도하지 않았다.



△ 부산일보, 3/27, 21면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신문은 장제원 의원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일 등 공신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 정치권의 위상을 더 높이는 역할을 기대했고(부산일보, 3/11), 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중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PK정치권력의 ‘장제원 쓸림’도 가속화할 것이라 전망했다(국제신문, 3/12).

지역신문의 기대 속에서 장제원 의원 일가에 대한 의혹은 보도되지 않았고,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도 <尹 최측근 장제원 활약 속 PK 현안 힘 실린다>(국제신문, 3/28), <장제원 ‘LCC통합본사 부산’ 놓고 말 바꾼 산은에 ‘레드카드’>(부산일보, 3/30)와 같이 제목에서부터 장제원 의원의 활약을 강조한 기사들만이 이어졌다.

지역의 3선 의원이자 새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만큼,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스피커를 자처하고 해결사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응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과의 과거 인연서부터 2026년 부산시장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부산일보, 3/14)는 정치 포부까지 속속 보도하면서 그 일가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반쪽짜리 소식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언론은 지역의 사학재단, 실세 정치인에 대한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지역민을 위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